■이호균 전남도의회 17대 의장

"소속 정당 다양…도정 비판 강화될 것"

F1·여수박람회 등 집행부와 적극 협력 모색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인턴 보좌관제 추진

제 9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호균(48·민주당·목포 3선거구) 의장은 9일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상 구현을 위해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현장 중심 정치 실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충실 ▲대규모 국제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 등 9대 의회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재선인 이 의장은 제 8대 전남도의회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목포과학대 총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의장에 당선된 소감은.

▲동료 의원들이 보내 주신 성원을 바탕으로 도의회가 도민 신뢰를 받는 의회 역할을 하는데 힘을 쏟겠다.

-도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도민들의 뜻은 6·2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생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도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

-민주당 외에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많아졌는데.

▲그만큼 전문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의정 구도가 형성됐다. 민의를 폭넓게 수렴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통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 외에 다른 정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도의회에 입성하면서 나오는 지적으로 알고 있다. 공감한다.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보니,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다를 수 밖에 없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어느 한쪽에 무게 중심을 두지 말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 서로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동안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에 대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복안은 있는가.

▲의장으로서 할 일은 의원들이 본연의 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이다.

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가 이뤄지도록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도지사와 의장의 소속 정당이 같은데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

▲도정 비판 기능은 원칙대로 할 것이다. 오히려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당 소속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에 한나라당, 무소속, 교육의원들까지 다양한 의원들로 의회가 구성됐다. 비민주계 소속 교섭단체까지 운영하게 된다. 견제와 감시 기능은 훨씬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힘을 보태겠다.

-불협 화음이 생길 수 있지 않는가.

▲의원들간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열어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생각이다. 민주당 외에 비민주계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를 비롯, 46명에 이르는 초선의원 그룹, 교육의원 및 여성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가 줄지어 예정돼 있는데.

▲향후 2~3년이 전남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다. 국제대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비롯해 2012여수세계박람회, 순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할 일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초선의원이 62명 중 46명이나 돼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선의원의 46%가 기초 의회에서 의정 활동을 해왔다. 그만큼 지역 민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전체 의원들에 대한 연찬회를 비롯해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회기 중이 아니라도 할 것이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초청한 강연회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이는 의원 전문성을 향상시켜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공약으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를 내놓았다. 구체적 추진 방안은 뭔가.

▲이 문제는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모든 의회의 문제로, 법제화를 촉구하는 게 시급하다. 따라서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하고 안건으로 채택해 국회·정당 등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인턴보좌관제 추진도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다.

▲마찬가지다. 도의회 전문성 및 견제·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다. 이 문제도 전국 타 광역시의회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논의가 돼야 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투자유치 총력 추진 협약 전남도는 지난 9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앞줄 가운데) 지사와 도내 22개 시·군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2000개 유치,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총력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박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읍면동의 기업유치위원이 역량을 결집하면 '기업 2000개 유치'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천안함 파장 상황 악화… 현대아산 손실액 3천억 넘어

■금강산 관광 중단 2년…향후 전망은

금강산관광이 중단된지 오는 12일로 2년째를 맞지만, 관광재개에 대한 희망의 빛은 더욱 희미해지고 있다.

우리 측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3월 천안함 피격이라는 대형 '폭풍'까지 겹쳐 금강산 관광 이슈가 사실상 실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7월11일 우리 측 관광객 고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튿날부터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잠정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은 2년이 지나도록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측은 피격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고원인은 '관광객과 남측에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또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선결과제'에 대한 우리측의 요구도 여전하다.

관광객 피격 사건 등을 둘러싼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2008년 11월28일부터는 개성관광도 중단됐다.

남북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8일 개성에서 개성·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당국간 대화를 가졌지만, 북측이 조속한 관광재개를 주장하면서도 관광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3대 선결과제' 요구에 대해 "이미 해결됐다"는 태도를 고수해 합의에 실패했다.

특히 북측은 4월 말 우리 정부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에 '몰수' 딱지를 붙이고, 현대아산 등 민간 업체들이 보유한 각종 관광 인프라를 동결해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 금강산 현지 인원을 16명만 남기고 모두 철수토록 했다.

관광중단으로 현대아산을 비롯한 관련 기업 등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현대아산은 그동안 3024억원의 매출 손실을 봤고, 관광 중단 전 1084명에 달했던 직원도 수차례의 구조조정으로 현재 328명으로 70%나 줄었다. 현대아산 협력업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 지역 경제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고성군에 따르면 관광중단 이후 고성지역에서는 159개의 음식점이 휴업하거나 폐업했고 숙박업소와 납품업체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585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전작권 이양 재연기 없다"

김국방 "2016년에 모든 미군은 평택으로"

김태영 국방장관은 11일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군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 재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추가 연기 문제는 지금도 연기했는데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때는 다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2015년 말이 되면 현재 군에서 판단하기에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핵심 전력을 확보하고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데 필요한 환경이나 기관이 구축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에 대략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정리되고 2016년 정도에 모든 미군 주둔지가 평택으로 옮겨진다"며 "그때 재연기를 한다면 연합사를 평택에 새로 창설하던가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완벽한 전작권 인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보리 '천안함 규탄 성명'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이하 현지시각)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날 'P5(상임이사국) + 2(한국.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문안을 9분 만에 토론 없이 통과시켰다.

안보리 의장국인 나이지리아의 조이 오구 대사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총 11개항의 성명문을 회의장에서 낭독했다.

성명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등 재발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에 따라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